

긴급진단/ 2021 수산업·어촌의 현실은 / 해양쓰레기와 수산업 피해

박영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2020-12-31 16:07



해양쓰레기 예방, 어업인 주인의식 강화가 최우선

어업인 95.2% "해양쓰레기 피해 심각"

해양쓰레기 예방계도에 수협역할 중요

외국유입 쓰레기 처리 정부지원 필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지침 마련을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연구소, 어업활동 등에서 해양쓰레기 저감과 대응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08년 2만5,240톤에서 2010년 9만5,632톤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 해안쓰레기의 총계임.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중에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2014년 860톤에서 2018년 2만644톤으로 연평균증가율이 약 121.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최근 7년간(2012~2018년) 제주도 제주시가 총 3만7,536톤의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고, 이어서 전남 완도군 2만9,592톤, 충남 태안군 2만3,705톤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전보다 확대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생물들의 기형과 죽음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단체의 환경보호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바다가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어업인들은 최근까지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해양쓰레기를 발견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획량·생산량 피해가 있다는 응답은 95.2%로 대부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해양생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의 삶의 터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개념을 살펴보면, 해양쓰레기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형물로서 재질과 종류, 기본 용도를 불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했을 때, 어업활동 과정에서 탈락, 투기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인 폐어구, 폐어망 등의 어구쓰레기는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어업인들의 역할과 대응이 필수적이다. 즉, 어업인들은 해상기인(起因) 해양쓰레기를 저감해야할 의무와 동시에 친환경적인 어업활동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어업인 예방·계도운동 강화 필요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한 첫 단계는 어업활동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 예방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다에 대한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강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계도운동 사례로는 6가지를 추진할 수 있다. 첫째, '어업활성화' = '해양쓰레기 발생량' 동일인식 고착 개선 추진, 둘째, 해양쓰레기 심각성·사명감·주인의식 강화, 셋째, 해양쓰레기 마대자루 필수 활용 후 집하장 처리 필수, 넷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해양·입항장소 투기 금지, 다섯째, 해양투기 금지, 여섯째, '정부·해경의 역할=제재', '조합의 역할=지원'이라는 인식 개선이다.

수협, 계도·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 예방 계도 운동을 위해서는 수협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어업인들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약 2~3회의 해양쓰레기 관련 교육을 수협에서 받았으며, 67.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수협에서는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수협 어업인·임직원 해양쓰레기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수거·처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활용·배포하고, 해양쓰레기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하여 지속적인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 계도·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업인들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법 강화, 해양쓰레기 현황의 심각성 강화 등의 해양쓰레기 교육프로그램의 요구가 높았으므로 이를 반영한 해양쓰레기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정부, 현장 애로사항 귀 기울여야

현 정부의 제3차 해양쓰레기 기본계획에 따르면 과학적이고 예방 중심의 관리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반면, 현재 어업인들은 발생예방의 측면(48.4%)보다는 수거 및 처리(51.6%)에 대해 더욱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2020년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 방안; 어업인 및 수협을 중심으로-'의 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즉, 아직까지 어업인들은 수거 및 처리사업의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어 현 정부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부정책과 어업현장과의 소통과 융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 주체로 정부 및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 정부정책 방향인 예방사업 추진과 어업인의 수거 및 처리사업이 융화되어 다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와 관련된 어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대응사업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통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업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관리지침을 마련해 해양쓰레기 마대 혼용 수거·처리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귀찮다는 이유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용 마대에 혼용하여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조업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혹은 부유쓰레기 수거 배포용 마대자루에 정보기입 강화를 통해 마대자루 수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 현재 수협 자체적으로 마대자루를 배포하고 어업인들에게 관련 정보기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마대자루를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강화를 위해서 정보기입 관리가 필요하며, 나아가 마대자루 활용과 관련된 정부의 독려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기인 쓰레기에 대한 어업인들의 피해가 극심해 외국기인 수거·처리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2018년 기준 외국기인 쓰레기는 개수기준 전체의 2%, 무게기준 전체의 4%, 플라스틱과 병뚜껑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기인 쓰레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외국기인 쓰레기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감소를 위해 외국기인 쓰레기의 수거·처리가 필요하다.

넷째,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 및 수매사업의 세부지침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 및 수매사업은 해양쓰레기 추진사업 중에서 가장 활발한 사업이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추가로 구축해줄 필요가 있다.

어업인 중심 예방운동 점검 시점

이처럼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 예방 계도 운동을 통해 바다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강화시키고, 어업인, 수협, 정부가 어우러져 해양쓰레기 예방·수거·처리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실제 미국은 해양쓰레기 대응시, 정부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에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각 지역 어업종사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며, 어업종사자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연합회 참여를 통한 처리 가이드라인 제작 및 활용을 통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강점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외국에서도 각각의 주체가 어우러져 해양쓰레기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우선적으로 어업활동으로부터의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어업인을 중심으로 한 해양쓰레기 예방 계도 운동의 추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